

총 무 처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720-4097 / FAX 736-4803

문서번호 조기 12210 -

시행일자 1997. 1.

( 제 1 안 )

받 는 곳 내부결재

참 조

취급		장 관	국무총리
보존		김영규	이우성
차 관	김영규		
국 장	김영규	기획관리실장	하
과 장	김국현	제도심의관	하
		조직1과장	하
		제도1과장	하
기안	이창길	제도2과장	하
		협조	

제 목 '97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국무총리 지시 제1997-5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97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97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 제 2 안 )

받 는 곳 받는곳 참조

제 목 '97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97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 는 곳 가(-03~04), 나(01~18), 다(01~18), 라(01~05)

( 제 3 안 )

받 는 곳 받는곳 참조

제 목 '97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97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97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 는 곳 가(03~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 무 총 리

# '97年度 政府組織管理指針

'97. 2

總 務 處

## < 순 서 >

### **[1] '97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 **[2] 주 요 시 책**

I.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량화

II. 자율성 · 책임성있는 조직관리체제의 확립

III. 행정규제의 전면 개혁

IV.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

V.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 추진

### **[3] 행 정 사 항**

## '97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기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조직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첫째,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분야를 감축하는 등 정부의 조직과 인력의 감량화를 추진한다.

둘째, 정부기능을 재조정하여 『국민 고객중심의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로 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정부조직을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진형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한시적인 조직운영제도를 개발·활용하고 부처별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주요시책

## I.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량화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경찰을 제외한 정부조직의 감량경영 기조 유지

### 1. 행정지원인력 1만명 감축계획의 추진

- (1) 각 부처는 자동화·전산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감소되거나 인력운영이 비효율적인 단순지원 기능분야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2) 정부는 철도·우정 등 현업관서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인력 규모에 대한 감축작업을 추진한다.
- (3) 총무처장관은 2월중에 부처별로 연차적인 감축규모를 확정하여 '97년도 조치계획분에 대하여 직제개정 조치한다.

### 2. 정원동결 정책기조의 유지

- (1) 각 부처는 삶의 질 향상분야와 국가경쟁력 제고분야에 한하여 필요시 조직을 보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조직과 인력을 상계 활용한다.
- (2) 총무처장관은 각부처에 대하여 단순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의 확대는 억제하고, 법령 제·개정등 신규업무 수요에 대하여는 기존조직을 최대한 상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3.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확보

- (1) 각 부처는 직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중장기 조직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제를 검토하여 요구한다.
- (2) 각 부처는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직제통칙) 제9조의2에 의거, 법령의 제·개정 또는 예산 요구시에 총무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3) 내무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준하여 일선기관 통·폐합, 민간위탁 등을 통한 감량경영을 추진한다.
- (4) 총무처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전보가 빈번한 직위에 대하여 특별관리하며 각부처의 직제개정시 우선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한다.

### 4. 내실있는 정부조직진단의 실시

- (1) 총무처장관은 정부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일선행정기관의 광역화 및 통합방안
  - 행정규제완화 대상기능 및 조직
  - 민간 및 지방이양 대상기능의 발굴 등
- (2) 총무처장관은 조직진단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을 보강분야, 감축분야, 현상유지분야로 구분·관리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연계된 장·단기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3) 각 부처는 소속 일선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광역화 또는 기관통합 방안을 강구한다.

## 5. 위원회 신설억제 및 운영의 활성화

- (1) 1997년은 『제9차 위원회 정비의 해』로서 '97년이전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조속한 법령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 폐지
  -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통폐합
  - 위원수가 과다하거나 고위직위주로 운영되는 위원회⇒축소조정
- (2) 각 부처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또는 기능상 중복되는 유사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획단 등 각종 위원회 활동 지원기구 설치시 총무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추진한다.
- (3) 각 부처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구성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가능한 한 여성·장애인 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며 위원(장)의 직급은 고위직화를 지양한다.

## 6. 정부산하단체의 효율적 관리

- (1) 각 부처는 『정부산하단체조직관리에관한지침』(조기01210-177, '92.9.7)에 따라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정부조직관리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한다.
- (2) 총무처장관은 정부산하단체 신설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Ⅱ. 자율성 · 책임성 있는 조직관리체제의 확립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책임성있는  
정부조직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 · 활용

### 1. 탄력적 조직관리 제도의 적극 활용

- (1) 각 부처는 행정수요 변동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을 통하여 대처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직제통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간 정원의 배정 및 이체제도를 활용한다.
- (2) 각 부처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증설을 억제하고 직제통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직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2. 부처별 책임운영 체제의 확립

- (1) 각 부처는 정원조정시 상위직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실무인력 보강에 역점을 두어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 (2) 각 부처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관리계층 또는 직위의 신설을 억제한다.
- (3) 각 부처는 직제통칙 제8조 제4항의 과단위기구 자율개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 3. 파트타임(Part-Time) 정원관리 제도의 도입

- (1) 총무처장관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유휴인력을 활용하고 계절적·시간대별 인력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Part-Time) 공무원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2) 각 부처는 단순민원·우정·판매·수납 등 상시근무가 불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제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 4. 복수직급제 운영의 내실화

- (1) 각 부처는 중간관리층의 복수직급 정원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주요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직위에 우선 배정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 5. 개방형 전문직위 제도의 도입

- (1) 총무처장관은 『직무분석추진협의회규정('95.10.13, 총리훈령 제319호)』에 의한 직무분석결과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등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한다.
- (2) 각 부처는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한 정원배정 및 세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

### Ⅲ. 행정규제의 전면 개혁

OECD가입을 계기로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의 개혁 추진

#### 1. 규제개혁 중점대상분야의 발굴 · 추진

- (1) 각 부처는 OECD에서 중점추진분야로 선정한 통신, 농업 등과 관련된 규제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정비한다.
- (2) 금융, 토지등 핵심 정책분야의 덩어리 규제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점 개선한다.
- (3) 건축, 위생, 세무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를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개선한다.

#### 2. 사회적 규제의 합리적 운용 · 관리

- (1) 각 부처는 생활안전,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규제가 불가피한 사회적 규제는 규제비용을 최소화 하고, 규제과정을 단순화 한다.
- (2) 각 부처는 분야별 유사 · 중복규제는 국민입장에서 가급적 통합 · 조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3. 규제 신설의 사전심사 강화

- (1) 각 부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며 가능한한 사전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 (2) 각 부처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시 규제에 따른 국가·사회적 이익과 국민의 불편부담을 비교형량하는 등 규제 영향평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규제를 억제한다.
- (3) 총무처장관은 각 부처가 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시한을 명시하는 규제일몰(Sunset)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규제입안자의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세부내용은 『'97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96.12) 참조.

### 4. 규제개혁 사후관리 강화

- (1) 각 부처는 규제개혁내용에 대한 신속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순회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
- (2) 총무처장관은 현행 다원화되어 있는 규제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IV.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중앙·지방간의 기능 재배분으로  
자치기반을 확충하고 행정의 종합적인 생산성을 제고

### 1. 지방이양사무의 적극 발굴

- (1)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수행중인 국가사무 및 지방위임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절차’와 ‘사무 구분 판단기준’[붙임6]에 따라 재검토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한다.
- (2) 이양대상사무는 개별적인 단위사무 보다는 일련의 관련사무가 포괄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2. 지방이양 확대기반 조성

- (1) 총무처는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통하여 이양사무를 확정한다.
- (2) 법제처는 법령심사시 기능상 지방이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총무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제·개정시 이를 반영한다.
- (3) 각 부처는 소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3. 지방이양 사후관리의 강화

- (1) 각 부처는 이양확정 사무 중 이양되지 않은 사무(특히 '94이전)를 조속히 법령조치하고, 법제처는 법령심사시 이양확정 사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2) 각 부처는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지방이양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가) 관련법령 개정시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하고
  - 나) 업무편람이나 처리지침 등 구체적 업무처리기준·절차·방법과 법령해설, 행정판례 등을 제공하며
  - 다) 이양사무에 대한 감독범위를 조정 통보하고 관련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며
  - 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 마)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무는 조례준칙을 작성·제공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 책임하에 처리한다.

## V.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 추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기능수행을 위한 행정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및 과감한 민간이양·위탁 추진

### 1. 위임위탁사무의 발굴 확대

- (1) 각급 행정기관은 소관권한중 하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추진하도록 한다.
- (2) 위임 또는 위탁은 사전에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당해사무 수행능력, 수용태세 등을 정밀분석한 후 행하고, 위임 또는 위탁과 동시에 인력·예산 등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사후관리의 강화

- (1)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사전보고의 요구등 불필요한 사실상의 사전통제를 지양하여 위임·위탁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 (2)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지침의 제공, 교육의 실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3] 행정사항

#### 1. '98년도 소요정원 제출

- '98년도 소요정원은 시설·장비도입 등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정하여 심사할 계획이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요정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97.4.30까지 '98소요정원(안)을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2. 위원회정비 이행 철저

- 제8차('95-'96)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아직 조치되지 아니한 [붙임1]의 위원회에 대하여 각 부처는 '97.6말까지 정비토록 하되,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최초 법률개정시에 반드시 조치하기 바람.
- 다만, '97.6말 까지 조치되지 아니하는 위원회 또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최초 법률개정시에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조치사유 또는 조치불가사유를 [붙임2]의 서식에 의하여, '97.7.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각 부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붙임3]의 양식으로 작성, '97.3.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

- (1) 각부처는 '96년도 위임·위탁 추진실적(『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 포함)을 [붙임4]의 <서식2>에 의하여 작성, '97.2.28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2) 각 부처는 '97년중에 조치예정인 위임·위탁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을 [붙임4]의 <서식1>에 의하여 작성, '97.2.28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4. 지방이양

- (1) 각 부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지방이양 추진대상 사무로 확정된 사무(별책, 「지방이양사무목록」 참조)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2) 중점이양대상 부처(14개)는 소관사무에 대한 이양여부 검토 결과를 [붙임5]의 <서식1.2.3>에 의하여 작성, 별도 송부된 디스켓에 수록하고 1부를 출력하여 디스켓과 함께 '97. 3.30 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 지방이양 대상부처

중점 이양대상 부처(14개부처)		기타 부처(22개 부처)	
분야별	부 처 명	분 야 별	부 처 명
지역산업 경제분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외교·국방	통일원,외무부,국방부,병무청
		국내질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역사회 문화분야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정책조정지원	총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재정·금융	국세청, 관세청
		사회간접자본	철도청
지방관리 분야	내무부, 조달청	고도의 전문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통계 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농촌 진흥청, 기상청, 문화재관리국



- (3) 내무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대상 부처의 국가사무(별도 송부된 중앙부처사무수록 디스켓을 참조)중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붙임5] <서식4>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여 '97. 3.30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이양완료·확정(추진중)사무 등 중복되는 이양희망사무 제외(별책, 「지방이양 사무목록」 참고)

- (4) 각부처는 지방이양 추진 및 사후관리상황을 [붙임5]의 <서식5>에 의하여 작성, '97. 6월말 및 12월말까지 각각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5. 협조사항

- 각 부처는 금년도 정부조직관리가 본 지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도 본지침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제8차('95) 정비대상위원회중 미조치위원회 현황

\* 총 33개 위원회

부 처 명	위 원 회 명	설치근거	정비구분
재정경제원 (9)	산업정책심의회	대 령	폐 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법 률	"
	보험심의위원회	"	"
	물가안정위원회	"	"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	대 령	"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	"
	예산자문위원회	"	"
	신경제추진위원회	"	직급조정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	법 률	폐 지
조 달 청 (1)	계약심의위원회	대 령	"
총 무 처 (3)	상훈심의회	법 률	"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대 령	"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법 률	"
공 보 처 (1)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대 령	"
내 무 부 (1)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	법 률	"
농 립 부 (5)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	"	"
	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	"	"
	낙농심의회	"	"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	"	"
	초지조성심의위원회	"	직급하향조정
산 립 청 (1)	중앙화전정리심의위원회	"	폐 지

부 처 명	위 원 회 명	설치근거	정비구분
통상산업부 (5)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법 률	폐 지
	광산보안위원회	"	"
	광업개발심의회	"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직급하향조정
	공업입지정책심의회	"	폐 지
보건복지부 (1)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	"
건설교통부 (5)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대 령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법 률	직급하향조정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
	국제공항운영협의회	대 령	폐 지
	유로도로심의회	법 률	"
해양수산부 (1)	내수면개발위원회	"	"

[붙임 2]

제8차('95) 정비대상위원회중 조치되지 않은  
위원회의 미조치사유 또는 조치불가사유

---

부 처 명 :

정비대상위원회	
설치근거법령	
정비예정내역	
미조치 사유 또는 조치불가 사유	
향후조치계획	

※ 정비예정내역란에는 폐지, 통·폐합, 위원장 또는 위원직급조정 등 기재

[붙임 3]

##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서

< 부처명 : >

① 위원회명					② 근거법령 조항				
③ 설치목적					④ 설치연월일				
⑤ 위원회운영 사무부서	실 · 국				과(직급별 정원 : )				
⑥ 위원회 구성  * 위원총수 : (부)위원장 포함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총수		공무원	교 수	협회·단체 임직원	전문가	여성	기타
	간사	직위		직 급		위원회 성격			
⑦ 위원회 기능									
⑧ 분과위원회 등	명 칭			구 성			기 능		
⑨ 운영실적 ( '95.1~'96.12)	본 회 의					분 과 회 의			
⑩ 예산집행 내역	'95					'96			
⑪ 위원회 정비에 관한 의견									

[붙임 4]

< 서식 1 >

'97 위임·위탁조치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

부처명 :

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위탁유형	조치계획

< 작성요령 >

1. 위임·위탁 유형란에는 지방위임(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등) 소속기관 위임(→ ○○청, ○○사무소 등), 민간위탁(→ ○○공사, ○○협회 등)을 기재
2. 조치계획란에는 『'97.○월중, 법개정후 시행령 개정』, 『'97.○월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 『위임·위탁규정개정시 조치』 등으로 각부처 조치계획을 시기·조치방법·선결사항등과 함께 기재

< 서식 2 >

'96. 위임·위탁 실적

부처명 :

위임·위탁사무명	기능근거법령	위임·위탁근거법령	위임·위탁 일 자	수임·수탁 기 관

[붙임 5]

지방이양 관련사무 보고작성 서식

< 서식 1 >

국가·지방사무 구분 총괄표

■ 총괄

○ 부처명 :

( '97. 1.30 현재 )

구분	계	③ 국가사무	④ 지방위임사무	⑤ 지방사무	비고
① 소기능수					
② 단위사무수					

■ 국가사무 수행기관 현황

( '97. 1.30 현재 )

구분	계	③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청장	타기관탁위	민간단체등위탁
① 소기능수							
② 단위사무수							



■ 지방이양 대상사무 및 이양확정사무 현황

( '97. 1.30 현재 )

구 분	합 계	⑥ 이양대상사무				⑦ 이양확정사무		
		계	'97	'98 ~ '99	2000 ~ 2002	계	완 료	추진중
① 소기능수								
② 단위사무수								

■ 사무구분별 지방이양 대상사무 현황

구 분	⑥ 지방이양 대상사무수			
	계	'97	'98 ~ '99	2000년이후
계				
국 가 → 지방사무				
지방위임 → 지방사무				

## < 서식1호 작성요령 >

- (1) ①소기능수, ②단위사무수 : 이양대상부처(14개)의 소기능 및 단위사무(『중앙·지방사무 총람』 참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사무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구분하여 소기능수와 단위사무수를 기재하되, <서식2호>의 부처별 중기능별 집계와 일치하여야 함.
- (2) ③국가사무 :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청장이 직접처리 하거나 위임한 사무와 타 국가기관, 산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처리하는 사무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제외)
- (3) ④지방위임사무 : 중앙정부의 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기관위임사무)
- (4) ⑤지방사무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로서 이양완료된 사무 포함
- (5) 법령상의 1개의 단위사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국가기관은 전국적, 광역적, 시·도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관장, 시·도는 관할구역내의 사항 관장 등) 하여 처리하거나,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각각 1개 사무로 기재  
 (예) 수산동식물 월동장 또는 월하장 지정(수산청, 시·도지사)  
 : 국가사무(수산청) 1개, 지방사무(시·도) 1개 사무로 기재
- (6) 타 국가기관, 산하단체,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는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파악 기재
- (7) ⑥지방이양 대상사무 : 국가사무와 지방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이양하려는 사무로 구분, 연도별로 기재(이양확정사무는 제외)
- (8) ⑦이양확정사무 :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91 ~ '96년도에 이양 확정된 사무를 대상으로 이양완료, 추진중으로 구분 기재 (별책 참조)

< 서식 2 >

이양대상부처 의견조회 서식

- 부 처 명 :
- 대기능명 :
- 중기능명 :

소기능	사무구분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지방사무	관계법령	① 의견조회	
계							
② 총 합		이양대상	이양확정	이양완료	사무폐지	내용변경	타법률승계

## < 서식2호 작성요령 >

- \* (1) 의견조회 및 (2) 종합란만 기재 (서식은 총무처 제공)

(1) 의견조회 : 국가사무와 지방위임사무에 한하여

1(이양대상), 2(이양확정), 3(이양완료), 4(사무폐지), 5(내용변경),  
6(타법률 승계), 7(지방위임), 8(현행 동일), 9(기타) 중

해당번호 를 기재하고 2. 3. 4. 5. 6. 7은 확정 또는 완료일자(년·월·일)을

해당번호 밑에 ( )속에 기재

- \* 2. 3(이양확정·완료)는 별책 『지방이양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 \* 4. 5. 6. 7은 관계법령이 제·개정된 경우 『관계법령』란에 그 법령으로  
수정하여 기재

- 1. 이양대상 : 국가사무와 지방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의  
고유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려는 사무
- 2. 이양확정 :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심의결과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
- 3. 이양완료 : 법령상 처리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등)  
로 개정된 사무
- 4. 사무폐지 : 법령상 관련조항의 삭제로 단위사무가 없어진 사무
- 5. 내용변경 : 해당법령의 개정등으로 단위사무의 사무명, 사무내용 등이  
변경된 사무
- 6. 타법률 승계 : 관련법령에 제·개정, 폐지, 승계, 통합등으로 근거법령이  
바뀐 사무
- 7. 지방위임 : 해당법령의 개정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 8. 현행동일 :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내용과 변경이 없는 사무
- 9. 기     타 : 국가사무를 앞으로 폐지하거나 산하단체, 민간에 위탁. 이양  
등을 하고자 하는 사무

(2) 종     합 : 중기능의 각 단위사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1)의견조회중 1. 2. 3. 4.  
5. 6. 9를 집계 취합하여 기재

(예 시)

- 부 처 명 : 내 무 부
- 대기능명 : 4. 지방행정기획
- 중기능명 : 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사무구분 소기능	국 가 사 무	지방위임사무	지 방 사 무	관 계 법 령	(1) 의견조회
소1. 임용권 행사	1.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②	1
.	.	.	.	.	.
소5. 인사운용 지도·감독	4. 인사보수 제도 관계법령 제. 개정			헌법 제95조	8
	5. 조례규칙준칙 시달			지방공무원법 제81조	8
	6. 인사행정 지도. 감독			지방공무원법 제81조	8
	7. 인사교류 권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①	1
	8. 특수학교 졸업자 특별임용 승인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17조 ①4	2 ( ' 95.12)
	9.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응시 배수 조정승인	1.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⑩1호바목)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5조 ②	2 ( ' 95.12)
	10. 특별승진 임용 승인	2.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⑩1호바목)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8의4 ①2.4호	2 ( ' 95.12)
	11.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	3.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⑩1호가목)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27조 제2항	2 ( ' 94. 12. 8)
.	.	.	.	.	.

사무구분 소기능	국 가 사 무		지방위임사무		지 방 사 무		관 계 법 령	(1) 의견조회
소9.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제도 운영					32.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	8
					33. 장학금 지급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장학 규정 제6조 16호	8
계	19		8		33			
(2) 종 합	이양대상	이양확정	이양완료	사무폐지	내용변경	타법률승계	기 타	
	2	4						

< 서식 3 >

## 중앙부처 지방이양 검토의견서

○ 부 처 명

①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② 근거법령	③ 사무현황		④ 사 무 내 용	⑤ 이양계획 년도
		사무종류	처리권자		

# < 서식3호 작성요령 >

\* <서식2호>중 ①의견조회란에 1(이양대상)로 기재된 사무만 기재

①, ②, ③, ④ :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

⑤ 이양계획 년도 : '97년도, '98 ~ '99년도, 2000년이후로 구분 기재

(예시)

## 중앙부처 지방이양 검토의견서

◦ 부 처 명 : 내 무 부

①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② 근거법령	③ 사무현황		④ 사 무 내 용	⑤ 이양계획 년도
		사무종류	처리권자		
1. 초지 및 조사료 (*8.4.3)	2개 사무				
①초지조성허가	초지법 제5조	국가사무	장 관	초지조성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	'97
② .	.	.	.	.	.
③ .	.	.	.	.	.



< 서식 4 >

자치단체 지방이양 희망사무 조사표

제출기관명 :                      작성자(담당사무관)                      실                      국                      과                      ○○○○(TEL                      일반                      구내                      )

① 기 능 명 (코드번호)		② 소관부처			
③ 단위사무명					
④ 근거법령					
⑤ 사무개요					
⑥ 사무구분		⑦처리권자		⑧이양받을 자치단체	
⑨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⑩ 자치단체 판단이유					
⑪ 이양후 기대효과					
⑫ 참고 · 기타					

## < 서식4호 작성요령 >

- ① 기 능 명 : 이양희망 단위사무에 대한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의 코드번호를 기재  
(예) "광역시·도 직속기관의 설치승인"의 단위사무(총람 p457 하단 참조)의 경우 대기능 4(지방행정기획), 중기능 1(지방조직관리 및 자치제도), 소기능 1(지방조직 설치 및 기구개편) ⇒ \* 4.1.1로 기재
- ② 소관부처 :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주관과 기재
- ③ 단위사무명 :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무명 기재
- ④ 근거법령 : 단위사무의 근거법령 기재(위임·위탁사무의 경우 위임·위탁근거를 기재하되, 수임·수탁기관도 표시)
- ⑤ 사무개요 : 단위사무의 사무내용을 약술
- ⑥ 사무구분 :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로 구분 기재
- ⑦ 처리권자 : 원처리권자와 처리권자 기재
- ⑧ 이양받을 자치단체 :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으로 구분 기재
- ⑨ 처리절차 : 업무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표시
- ⑩ 자치단체 판단이유 : 이양받고자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 (별지 작성가능)
- ⑪ 이양후 기대효과 : 지방이양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술 (별지 작성가능)
- ⑫ 참고·기타 : 관련통계, 유사 또는 관련기능, 용어해설, 외국사례 등을 기재 (별지 작성가능)

## 지방이양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상황

(TEL : - )

※ 조사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로 문의하기 바람.  
(전화 : 720-2062~3)

## < 서식 5호 작성요령 >

- (1) 소기능명 : 『지방이양 사무 목록』(별첨)상의 이양대상 사무가 포함된 소기능명을 기재 (예 : 지방조직 설치 및 기구개편)
- (2) 대.중.소기능 고유번호 : 당해 소기능의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대.중.소기능 고유번호 기재 (예 : \*4.2.5)
- (3) 단위사무명 : 소기능별로 이양조치(법령개정)된 단위사무명을 기재하고, 사무별 근거 법령 및 이양일자를 ( )안에 기재  
(예)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②항 : '94. 7. 1)
- (4) 이양사실 통보 : ①통보한 공문의 문서번호, ②공문의 제목, ③주무부처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양사실을 공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한 일자(예 : ○○년 ○월 ○일)를 기재
- (5) 통보대상 자치단체 : ① ②번중 통보대상 자치단체 및 기관수를 기입
- (6) 감독범위조정 개선 : 주무부처에서 이양사무에 대한 감독범위를 자치단체에 조정 통보한 내용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관련 제도·관행 등을 개선(승인·보고폐지, 사후보고전환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술
- (7) 소기능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지원사항 :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소기능별로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사항을 기입한다.  
(예) ①지침부여(2건), ②교육실시 

정기 : 2회
수시 : 1회

 총 3회  
③예산(1,000천원) ④정보·기술제공(4건)
- (8)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
  - ① 실시년월일 : 실태를 직접 조사한 년월일자
  - ② 주요내용 : 실태확인·평가의 주요착안 사항
  - 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 사무처리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지식, 능력정도등 파악
  - ④ 자치단체 건의사항 : 이양사무에 대한 자치단체 개선요구사항 및 기능이양과 관련된 제반건의내용 기재

※ 1개 소기능상 단위사무의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  
: 근거법령별로 서식 작성 요함.

## [붙임 6]

###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절차(예시)

- (1) 국가사무(지방위임사무 포함)중 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무는 폐지 추진
  - 행정의 간소화, 규제완화, 간여범위 축소 차원에서 필요성 여부 검토
- (2) 민간단체 이양·위탁, 민영화 등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선행(제3섹터 포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산하단체의 기능 재검토, 공사화 계획등과 연계 추진
- (3)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무 선별
  - 국가사무(지방위임사무 포함)에서 발굴
  - 사무배분원칙·기준·지표 등 활용
- (4) 외국의 실시사례와 비교·검토·분석
- (5)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분류  
(지방자치법령상의 예시사무 참조)
- (6) 이양확정된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이양(관련법령 등 개정)

#### ※ 단계적 이양 방안

- 단순집행적 사무 : 즉시 이양
- 업무가 단순화 또는 표준화 되어 있는 위임사무 : 우선 이양
- 전문적 지식·기술 등이 필요한 사무 : 인력보강, 기술축적후 이양

## 사무구분 판단기준

### 1. 적용원칙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판단기준을 단위사무, 소기능, 중기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가. 전국적 통일성 대 지역성

- (1) 국가의 종합적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업무인가 ? (중앙)  
지역의 개별적 이해관계·편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가 ?  
(지방)
- (2) 사무처리 기준의 통일적인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한가 ? (중앙)  
사무처리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 (지방)
- (3) 사무효력(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전국적인가 ? (중앙)  
사무효력(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지역적인가 ? (지방)
- (4) 주민의 이해관계가 간접적인가 ? (중앙)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가 ? (지방)
- (5)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적은가 ? (중앙)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많은가 ? (지방)
- (6) 필요한 정보의 수집대상이 전국적인가 ? (중앙)  
필요한 정보대상이 지역적 정보인가 ? (지방)

## 나. 경제적 효율성

- (1) 광역적·대규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경비절약·능률성제고 등 이익이 있는가 ? (중앙)
- (2) 당해 자치단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외부효과가 미치는가 ? (중앙)
- (3) 자치단체간의 경쟁효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가 ? (지방)
- (4) 지역적 실험의 필요성이 있는가 ? (지방)

## 다.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 (1) 사무수행을 위한 예산·정보·기술수준 고려시 지방에 의한 업무수행이 곤란한가 ? (중앙)
- (2) 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가 ? (지방)
- (3) 사무이양시 예산·인력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가 ? (중앙)
- (4) 사무이양시 발생하는 예산·인력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 ? (지방)

## 라. 지역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 (1)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인가 ? (중앙)  
자치단체간 형평성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사무인가 ? (지방)
- (2) 제3자적 공정성이 필요한가 ? (중앙)  
제3자적 공정성이 덜 필요한가 ? (지방)

## 마. 정책적 성격 대 집행적 성격

- (1) 일반적인 기준·요건·범위의 설정 등 정책수립 업무인가 ? (중앙)
- (2)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는 사무인가 ? (지방)

## 2.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국가사무 예시

### 가. 지방자치단체 예시 (지방자치법 제9조)

기 준	사 무 예 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li> <li>○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li> <li>○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li> <li>○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li> <li>○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li> <li>○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li> <li>○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li> <li>○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li> <li>○ 공유재산관리</li> <li>○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li> <li>○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li> </ul>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li> <li>○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li> <li>○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li> <li>○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li> <li>○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li> <li>○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li> <li>○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li> <li>○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li> <li>○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li> <li>○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li> </ul>



기 준	사 무 예 시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li> <li>◦ 농업자재의 관리</li> <li>◦ 복합영농의 운영·지도</li> <li>◦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li> <li>◦ 농가부업의 장려</li> <li>◦ 공유림관리</li> <li>◦ 소규모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li> <li>◦ 가축전염병 예방</li> <li>◦ 지역산업의 육성·지원</li> <li>◦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li> <li>◦ 중소기업의 육성</li> <li>◦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li> <li>◦ 우수 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li> </ul>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사업</li> <li>◦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li> <li>◦ 도시계획사업의 시행</li> <li>◦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li> <li>◦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li> <li>◦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li> <li>◦ 자연보호활동</li> <li>◦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li> <li>◦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li> <li>◦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 지방궤도사업의 경영</li> <li>◦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ul>

기 준	사 무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li> <li>◦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li> </ul>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운영·지도</li> <li>◦ 도서관·운동관·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li> <li>◦ 지방문화·예술의 진흥</li> <li>◦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li> </ul>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li> <li>◦ 화재예방 및 소방</li> </ul>

## 나. 국가사무 예시 (지방자치법 제11조)

-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 (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3. 사무배분의 원칙 (총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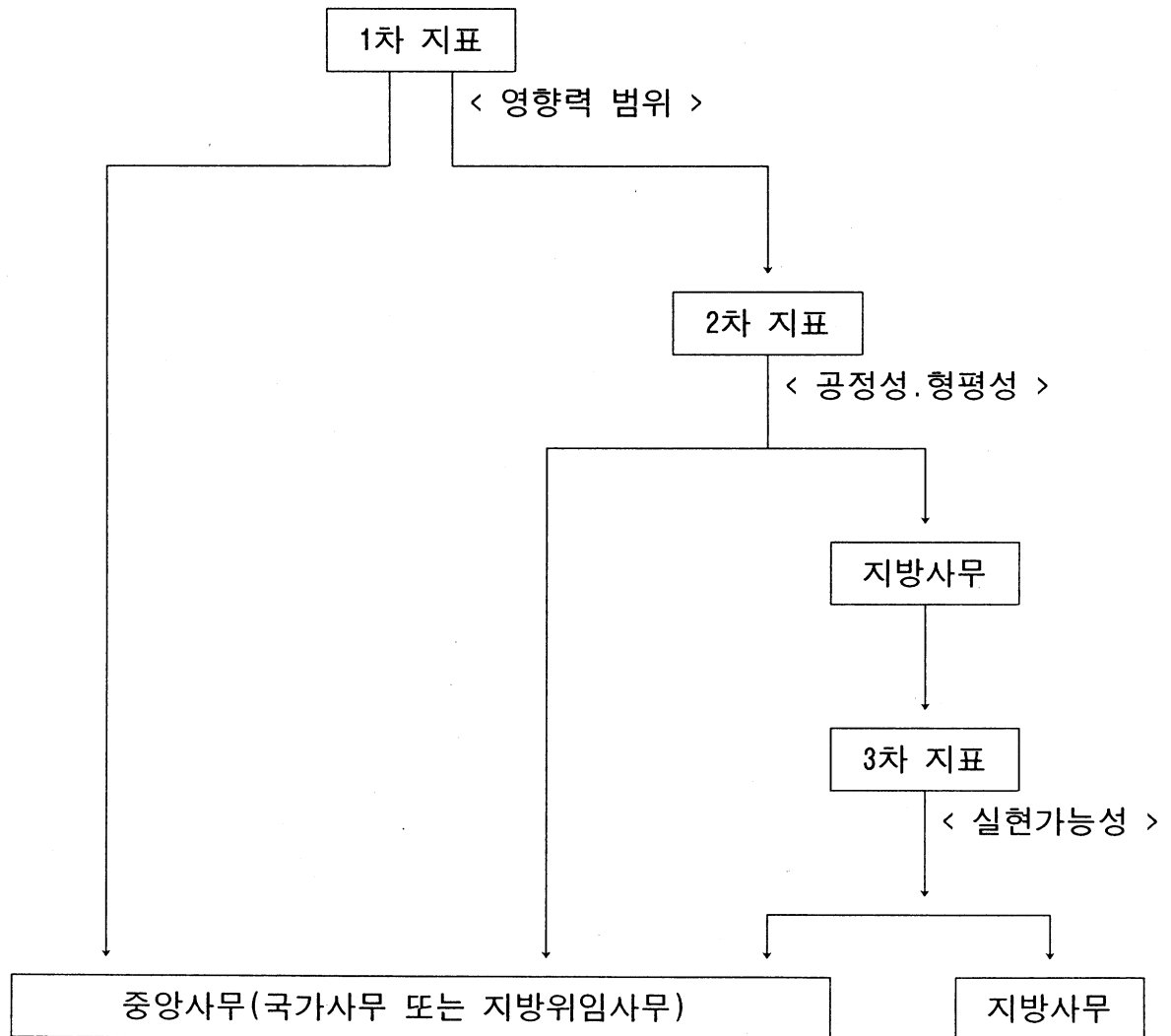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현지성·지역성·주민밀착성의 원칙)
  - 각종 기능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계층에 우선 배분
-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권한·책임 명백화의 원칙, 갈등제거의 원칙)
  - 기능별로 사무주체, 감독관계, 경비부담 등을 명확히 하여 배분
- 행정능률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능률적 집행의 원칙)
  - 기능별로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계층에 배분
- 행정수요의 특수성 적합의 원칙
  - 모든 기능은 도시와 농촌, 대규모(광역)와 소규모(기초) 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
- 정책·집행 분업의 원칙 (계획과 집행의 분리 원칙)
  - 중앙정부는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 및 기준설정을, 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분
- 이해관계범위 고려의 원칙 (이해관계 귀속의 원칙)
  -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을, 지방단체는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분
- 상호협력의 원칙
  - 중앙·지방간, 인근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공존시 상호협력하여 기능 수행하도록 배분
- 재정·기술능력의 원칙 (경비부담 능력의 원칙)
  - 모든 기능은 재정 및 기술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되, 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한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배분
- 지역종합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 지방적 성격이 강한 기능은 전체적,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배분

#### 4. 국가·지방사무 배분기준의 지표 (총무처)

##### 가. 지표의 분류

지표의 종류와 내용	중 앙	지 방
<p>대분류를 위한 지표 .....</p> <p>기본지표</p> <p>1차지표(영향의 범위)</p> <p>    전국적 계획에 의한 조정</p> <p>    사무의 바람직한 적용방법</p> <p>    사무효력의 인정</p> <p>2차지표(공정성, 형평성)</p> <p>    제 3자적 공정성</p> <p>    자치단체간의 형평성</p> <p>실행지표(실현가능성) : 3차지표</p> <p>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의</p> <p>    행.재정.기술적 동원능력</p> <p>    사무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p>	<p>필요하다</p> <p>통일적 적용</p> <p>전국적이다</p> <p>필요하다</p> <p>필요하다</p> <p>부족하다</p> <p>필요하다</p>	<p>불필요하다</p> <p>지역특성고려</p> <p>지역적이다</p> <p>불필요하다</p> <p>불필요하다</p> <p>충분하다</p> <p>불필요하다</p>
<p>세분류를 위한 지표 .....</p> <p>    사무의 절차상의 위치</p>	<p>계획.지원</p>	<p>조사.집행</p>

## 나. 흐름도



총 무 처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720-4097 / FAX 736-4803

문서번호 조기 12210 -

시행일자 1997. 7. 1.

( 제 1 안 )

받 는 곳 내부결재

참 조

취급		장 관	국무총리
보존		김영규	이우성
차 관	김영규		
국 장	김영규	기획관리실장	하
과 장	가국현	제도심의관	하
		조직1과장	하
		제도1과장	하
기안	이창길	제도2과장	하
		협조	

제 목 '97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국무총리 지시 제1997-5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97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97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 제 2 안 )

받 는 곳 받는곳 참조

제 목 '97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97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 는 곳 가(-03~04), 나(01~18), 다(01~18), 라(01~05)

( 제 3 안 )

받 는 곳 받는곳 참조

제 목 '97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97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97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 는 곳 가(03~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 무 총 리